

2011년 서울시 기출

지방자치론

해설 : 이동호 교수

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
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서울)

- 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표현하고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한다.
- ② 단체자치는 단체의 권리를 중요시하나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 ③ 단체자치에서 지방정부형태는 주로 기관대립주의이다.
- ④ 주민자치에서 권한부여 방법은 주로 개별적 지정주의이다.
- ⑤ 단체자치에서 국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방법은 주로 사법적 통제이다.

해설 ⑤

단체자치에서 국가가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방법은 주로 행정적 통제이다. 주민자치에서 주로 사법적 통제 내지 입법적 통제를 한다.

문 2. 다음 중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서울)

- ① 식민지 시대에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 ② 흑인투표권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는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이다.
- ③ 딜런의 법칙(Dillon's rule)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다.
- ④ 홈룰(Home Rule)은 주(州)가 가진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 ⑤ 클린턴은 신연방제(New Federalism)를 주창하였다.

해설 ⑤

신연방제는 1969년 닉슨(R. Nixon)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존슨(Johnson) 행정부 아래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하면서 등장하였다. 연방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고, 주와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연방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문 3. 다음 설명과 관련성이 깊은 시대는? (2011년, 서울)

- 면(面)제가 실시되어 면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졌다.
- 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 면제가 실시되면서 면은 지정면과 그 외의 일반면으로 나누어졌다.
- 지정면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형태의 면이었다.

- ① 조선시대
- ② 일제강점기
- ③ 미군정기
- ④ 제1공화국
- ⑤ 제2공화국

해설 ②

일제는 1913년 부제(府制)(최초의 공법인), 1917년 面制, 1930년 郡制·道制의 공포로 道·府·郡·面은 법인격을 부여받고 법제상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제도는 외형상으로 자치적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집행기관 절대우위의 중앙집권적 관료통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문 4. 서울특별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처음 선출한 때는? (2011년, 서울)

- ① 1952년 제1차 지방선거
- ② 1956년 제2차 지방선거
- ③ 1960년 제3차 지방선거
- ④ 1991년 제4차 지방선거

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

해설 ③

1960년 12월 제3차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도 및 시·읍·면의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최초의 특별시장 및 도지사 직선이었다.

문 5.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1년 문제변형, 서울)

-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모든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다.
- ② 교육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된다.
- ③ 공직의 안정성을 위해 주민은 동일인을 2회 연속 소환할 수 없다.
- ④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⑤ 주민소환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한 자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따라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해설 ④

- 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교육감도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③ 횡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⑤ 주민소환으로 인해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문 6. 우리나라 사무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서울)

- ① 일반적인 틀로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자치구의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 ④ 가족전염병 예방은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 ⑤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인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일부 반영한다.

해설 ④

가족전염병 예방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에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이다.

문 7.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은? (2011년, 서울)

- ① 서울시와 경기도 간 분쟁조정
- ②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 간 분쟁조정
- ③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간 분쟁조정
- ④ 강남구와 송파구 간 분쟁조정
- 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간 분쟁조정

해설 ④

동일 시(예컨대, 서울시)에서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 분쟁조정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다.

문 8.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1년, 서울)

- ① 감사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한다.
- ② 시·도의 경우 감사기간은 7일 이내이다.
- ③ 시·군·자치구의 경우 감사기간은 5일 이내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④

①, ②, ③ 지방의회의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문 9.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위원의 징계 종류와 징계 요구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2011년, 서울)

-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③ 6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④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 ⑤ 징계요구시 의회의 장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해설 ③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0.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2011년, 서울)

- ①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 ② 의안 및 예산안 발의권
- ③ 조례공포권
- ④ 지방의회 부의안건 공고권
- ⑤ 지방의회 의회규칙제정권

해설 ⑤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문 11.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서울)

- ①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재정보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②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반대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 ③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 ④ 세외수입의 수입형태는 현금 외에 다른 것도 있다.
- ⑤ 세외수입은 법령상 혹은 성격상 그 재원의 용도가 특정적이지 않고 일반적일 경우가 많다.

해설 ⑤

지방세외 수입은 보통 일반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세입 근거를 분석해 본다면 수입 근거에 따라 지출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 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011년 서울)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만 얻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법률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계산된다.
- ⑤ 우리나라는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해설 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③ 지방재정법 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⑤ 일반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와 특정 재원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이에 두 가지 재원의 특성을 절충하는 형태로 포괄보조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의 총량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재원을 교부한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 계정과 분권교부세 사업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